



#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

-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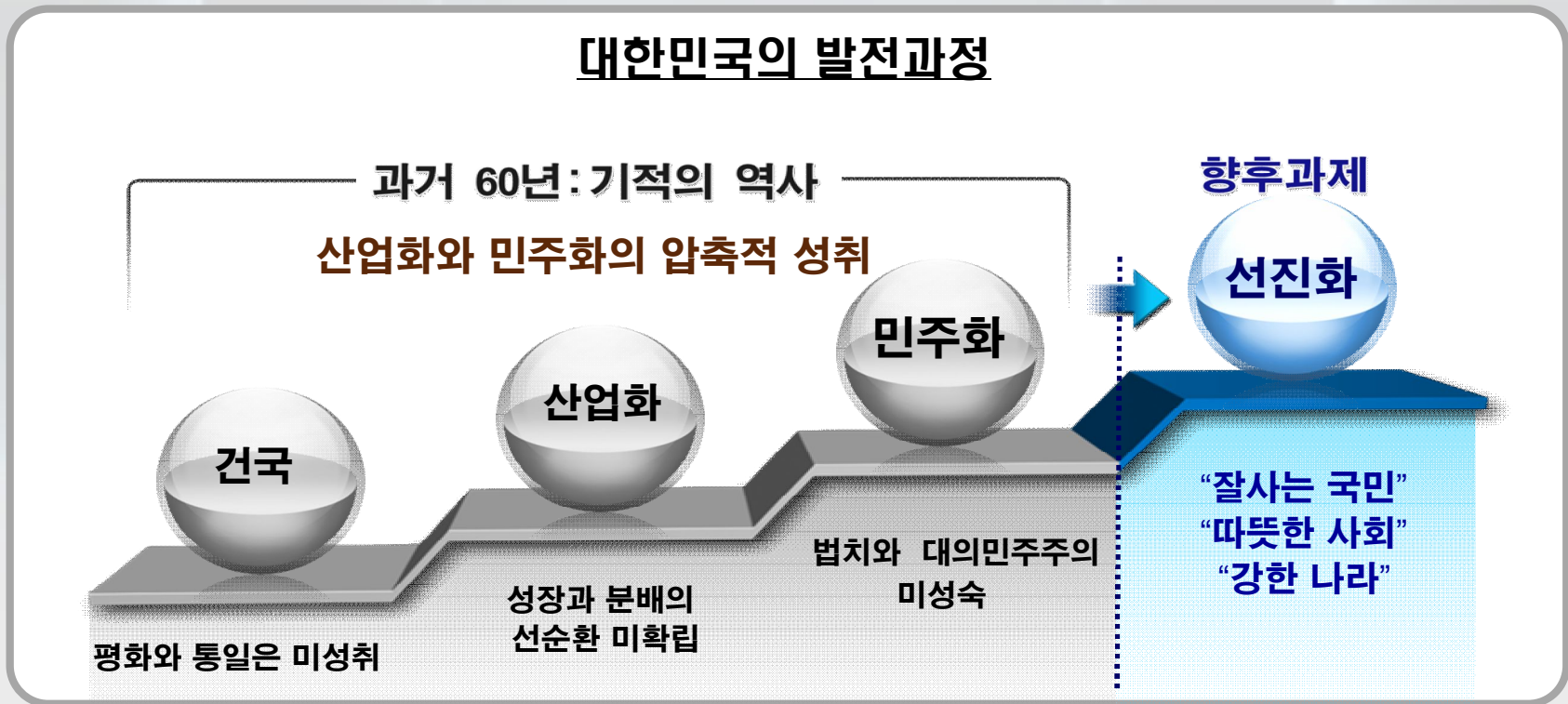
대통령직속

미래기획위원회

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& Vision

# 1. 검토배경

- ❑ **인구문제**는 미래 선진화 사회 달성에 있어 **가장 큰 잠재위협요인** 중 하나
  - \* 출산장려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 (대통령님, '09.6,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)
- ❑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에 대한 부담 내지 불안을 반영
- ❑ **출산율 제고정책**은 궁극적으로 **삶의 질을 향상**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
  - 삶의 질 향상은 서민·중산층 대책의 지향점이자 **선진화의 기반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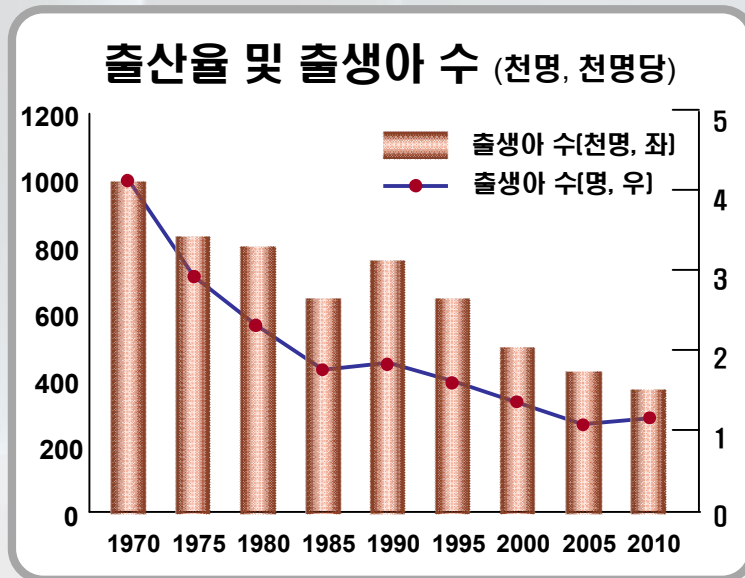
## 2. 저출산 현황

❏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1.19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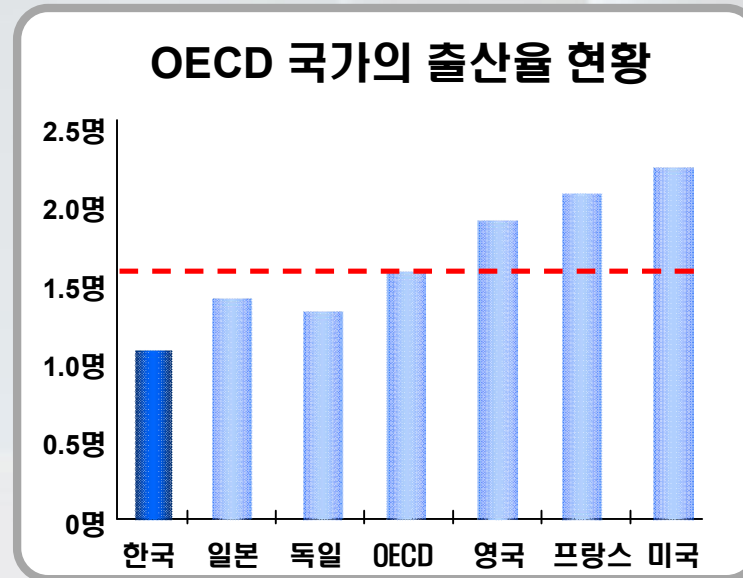
▶ OECD 국가 중 최저수준(OECD 평균 1.6명)

▶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1.0명 이하 하락 우려(보사연, '09.9)

❏ 출생아 수도 1998년 63.4만명에서 2008년 46.6만명으로 감소



\* 자료 : 통계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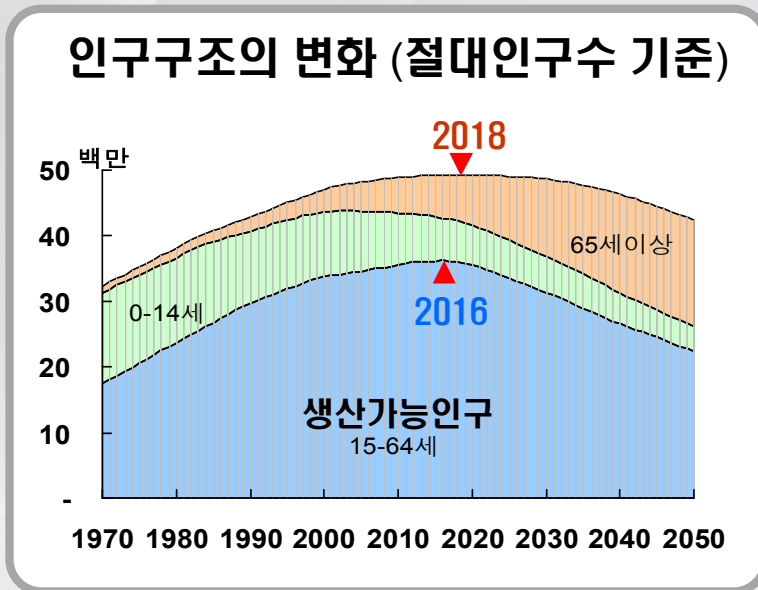
\* 자료 : OECD, Family Database, 2009

# 3. 저출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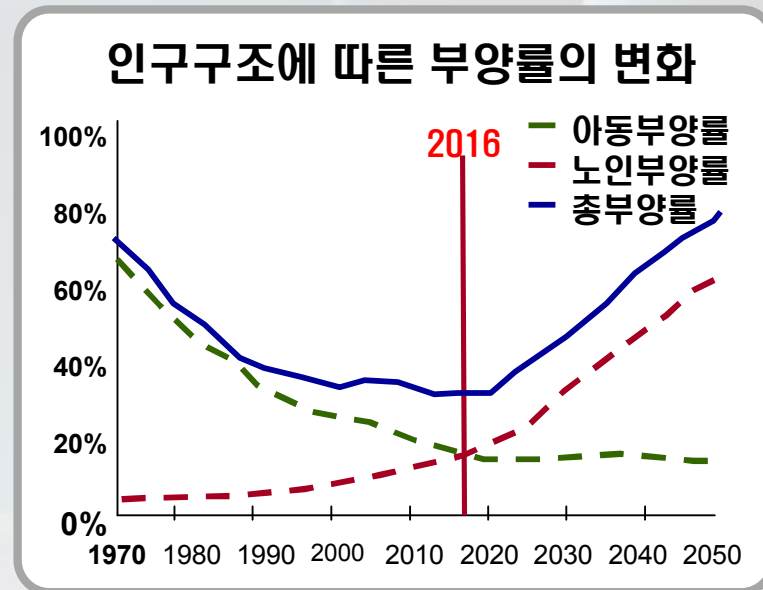
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, 2018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전망

2016년 이후부터 사회전체의 총부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할 전망

\* 2005년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 부양, 2025년에는 약 3명이 노인1명 부양



\* 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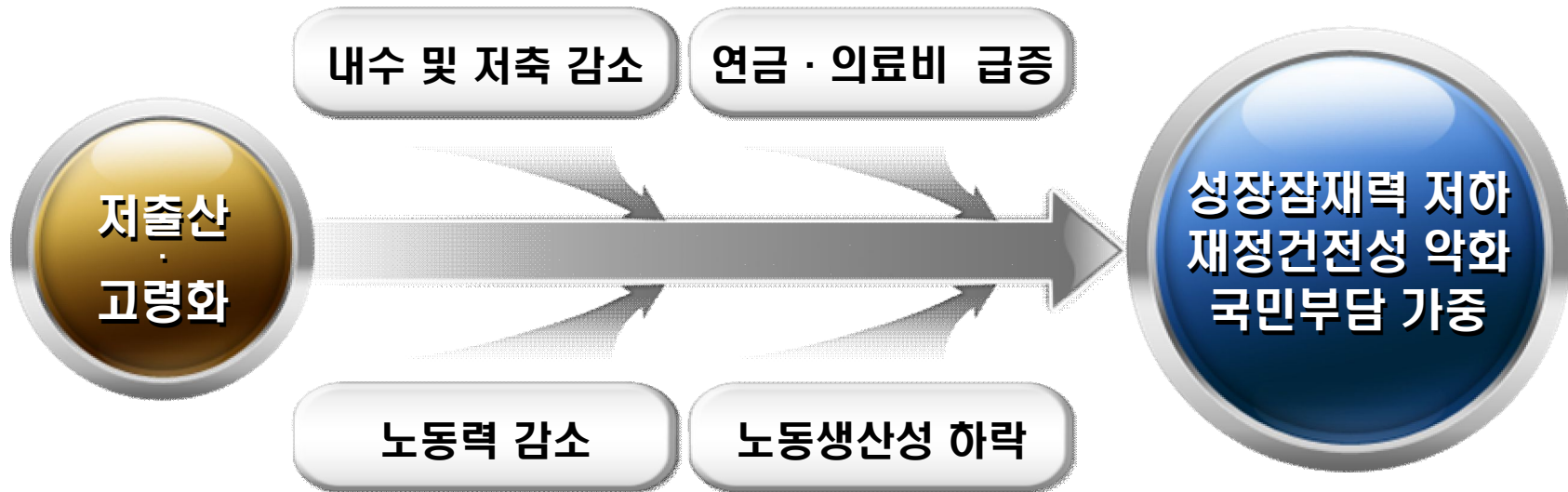


\* 자료 : OECD, Family Database, 2009

# 4. 저출산의 사회적 충격

- 저출산은 성장잠재력 저하, 재정건전성 악화 등 사회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
  - 잠재성장률(KDI, 2006) : ('03 ~ '10년) 4.6% → ('10년대) 4.21% → ('20년대) 2.9%

저출산·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구조



# 5.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

- ❑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·경제·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
- ❑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억제정책도 출산을 하락 및 가치관 변화에 상당한 영향



# 〈참고〉 저출산의 주요 요인 관련 현황

## ❏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여건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동시에 저해

- OECD 주요 외국과 비교시 한국의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특히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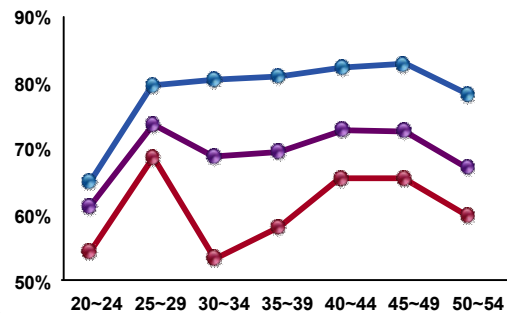
## ❏ 여성에 편중된 과도한 육아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의지 저하

-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지원망이 약화되는 가운데,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, 남성의 육아참여 부족 등 가족중심의 사회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출산에 따른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경향

## ❏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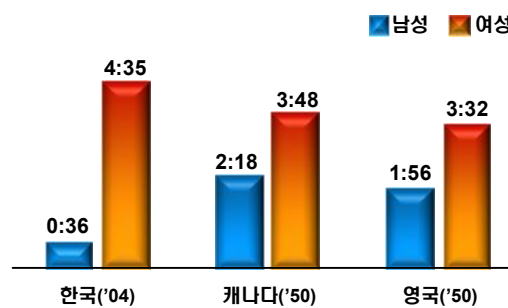
- 특히 초혼연령 상승은 가임기간 단축, 출산위험 등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을 저하

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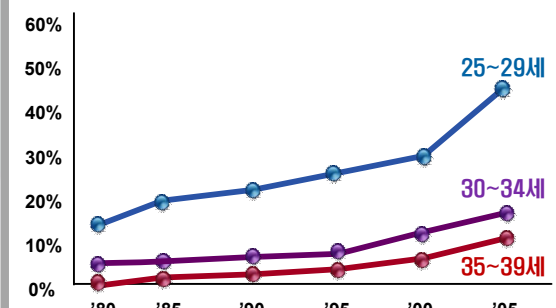


● OECD 고출산국가(1.8이상)  
 ● OECD 저출산국가(1.4미만)  
 ● 한국(1.19)

남녀 가사노동 시간



미혼율의 상승



# 6-1. 그간 추진대책의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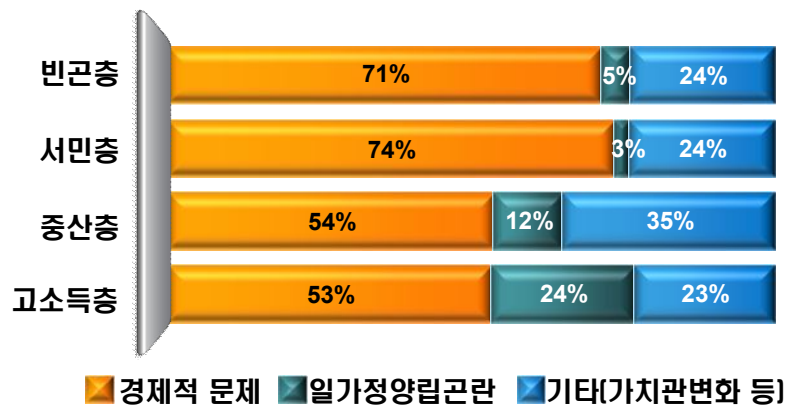
## 중산층의 다양한 요구 고려 미흡

- ▶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과 양육시설의 양적 확대에 주력
- ▶ 중산층, 맞벌이가정 등은 일과 가정 양립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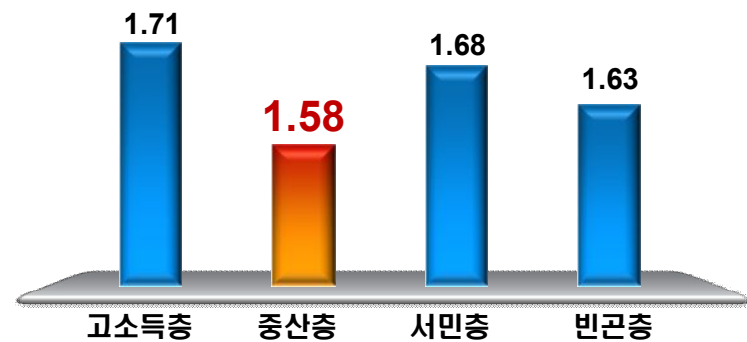
##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

- ▶ 실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고려 부족
  - \* 기업의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남성의 육아동참 활성화 노력 등 미흡

소득계층별 출산중단사유 (1자녀 이하, 2009)



소득계층별 출산자녀 수(2009)



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「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」



## 6-2. 그간 추진대책의 한계

### ❖ 사회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배려 미흡

#### ▶ 미혼모,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정책대응 불충분

- \* 한부모가족 중 미혼가구 수 : 14만 2천가구(2005)
- \* 결혼이민자 16만 7천명, 다문화가정 자녀 10만 3천명(2009.5)

#### ▶ 사회가치관 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포기 사례 과도

- 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, 아이의 불안정한 미래 등을 우려하여 출산 및 양육 기피가 만연함에 따라, 한부모 가정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 되지 못한 채 낙태와 해외 입양의 악순환 지속
- \* 연간 낙태 시술건수 약 34만 건 (2005, 추정)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(약 44만명)의 78% 수준
- \* 연간 입양건수 2,556명으로 이 중 해외입양은 1,250명 (2008년)

### ❖ 국민의 해외유출 방지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노력 미흡

#### ▶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에 입각한 국적제도 운영으로 매년 국민 순유출 발생

- \* 국적상실자(211,987명)가 국적취득자(74,648명)의 3배 (최근 10년간, '99~'08년)

#### ▶ 국내 기업의 우수 해외인력 유치필요성 증가 (인도의 IT 인력 등)

# 7. 주요 외국 사례의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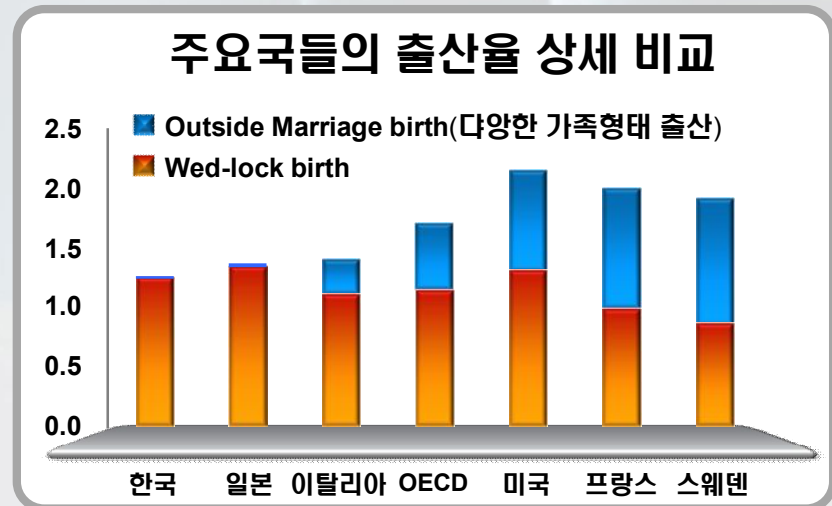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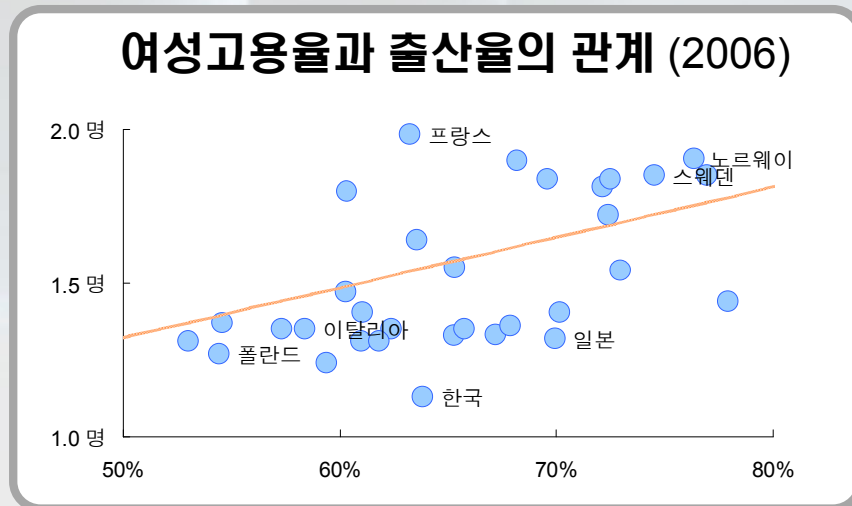
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하고 양성평등이 높은 사회

- 특히, 일·가정 양립이 원활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모두 높음

\* 상대적 고출산국가 : 미국(2.12), 프랑스(2.0), 스웨덴(1.91) 등

\* 저출산 국가 : 이탈리아(1.35), 스페인(1.34), 일본(1.32) 등

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전통적인 결혼제도 이외 다양한 가족형태에서의 출산비중이 높은 편 (스웨덴 54.7%, 프랑스 50.4%, 미국 43.7% 등)



# 8. 정책추진방향

추진  
목표

저출산 극복을 통한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

정책  
분야

자녀양육부담 경감

일·가정 양립기반 확대

한국인 늘리기

기본  
방향

- 구조적 비용경감
- 다자녀 가구 우대

- 근로유연성 확대
- 남녀 공동 육아참여 확대

-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
- 해외 우수인력 유치

주요  
추진  
과제

- ▶ 육아지원 및 교육 서비스 개선
- ▶ 교육비·주거비 등 부담 완화
- ▶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

- ▶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
- ▶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- ▶ 임신출산전후 고용불안 해소
- ▶ 가정내 양성평등 확대

- ▶ 미혼모 가정 등 지원
- ▶ 다문화 정착 지원
- ▶ 생명존중(낙태방지) 분위기 조성
- ▶ 신축적 이민정책(복수국적) 추진

추진  
원칙

- ▶ **중산층의 출산의지 제고**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
- ▶ 여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**가족중심적 사회환경 조성**
- ▶ **인적자원의 확충 및 역량강화**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

# 9-1. 정책제언

##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 추진

- ▶ 자녀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 추진

\* 절감된 예산은 0-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강화에 투입

- ▶ 대상 아동의 연령대에 맞춘 육아 및 보육 지원책 강화

### ▶ 검토과제

\*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앞당기기

\* 0-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

\* 3-4세의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하여 질적 수준 제고

\* 두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추진

\* 육아 및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평가를 강화하여 믿고

말길 수 있는 시설 확대

(특히, 소규모 보육시설 확대를 위하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, 지방노동관서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고, 직장 밀집지역에서는 직장연합 보육시설의 설치 적극 장려)

## 9-2. 정책제언

###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극 검토

▶ 과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(셋째 자녀 건강보험 적용 배제 등)에 버금가는 사회적 출산장려 지원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

▶ 검토과제 (셋째아 이상 가구에 대하여)

\*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

\*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및 취업시 우대방안 강구

\* 부모의 정년연장(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)

\* 세제지원 방안 등 검토

###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불확실성 해소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

▶ 중산층키우기 휴먼뉴딜 및 신성장동력 등 기 발표 정책 지속추진

▶ 청년층의 결혼부담 경감을 위해 과도한 결혼비용 절감 및 만나는 기회 마련

# 9-3. 정책제언

## ❖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

- ▶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로,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남성의 동참 필요

\* 유럽의 저출산 정책은 “일·가정 양립”을 통한 출산을 제고에 초점

- ▶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무관행을 탈피하고, 가족으로 돌아가 가사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시급

\*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이와 아울러 기업이 직원의 역량개발에 적절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 필요 (McKinsey & Company, '09.11)

### ▶ 검토과제

- \* 임신출산 여성 우대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
- \*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
- \*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(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)

# 9-4. 정책제언

##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·제도적 수용성 제고

- ▶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없는 양육여건을 조성하고,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강화
- ▶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여건 조성
- ▶ 검토과제
  - \* 낙태 줄이기 캠페인 및 낙태 안하는 사회 환경 조성
  - \*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(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)의 철폐
  - \* 한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양육기반 강화
  - \*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(위탁)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

##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

- ▶ 이민정책 선진화 및 단일 국적주의 완화
- ▶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한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
- ▶ 검토과제
  - \*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
  - \*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
  - \*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- \* 배우자 출신국가 이해제고를 위해 가족통합교육 실시 등

# 10. 후속조치 추진방안

## ❖ 민간부분

- ▶ 「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」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다양화
- ▶ 범국민 인식개선 및 캠페인 전개
  - 가족중심적 생활 유도,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, 낙태방지 등 중점 추진

## ❖ 정부부분

- ▶ 저출산 대책 추진체계 정비
  - 정부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총리실에 「저출산대책 추진협의체」 운영 등
- ▶ 세부대책 구체화 및 중장기 재원마련 방안 검토
  - 내년도 「중기 재정운영계획」에 저출산 문제 고려
  - 내년도 수립 예정인 「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11~2015)」에 확정 반영('10)

❖ 저출산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 →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